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침수피해 공공시설 빠른시일 내 복구를”

도의회 문건위, 도민안전실 등 업무보고서 '특사경 통한 음식점 위생상태 점검'도 요청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제3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의원들은 침수피해 공공시설의 조속한 피해 복구, 한빛원전 관련 대책 마련,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 청년 주거 문제 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속한 개설 등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진척도가 8% 가량으로 더딘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복구를 완료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내 AI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방역 주관 부서와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안전실 차원에서 예찰이나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 대책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자연재난 발생시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홍수해보급’에 대해 올해 세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 범위에 포함된 지역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구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올해는 위원을 적극적으로 개회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부 지원해주더라도 실제 손실은 훨씬 더 크고 힘든 상황이다”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계도를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 부안군 주민들이 타 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고 그 위험을 감당해 오고 있다”며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전 사고 위험 범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실시 용역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아져 배달 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사경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도의회 행정위, 자치행정국 등 올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7일 제3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등 2021년 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2021년 자치행정국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행정지원과 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위한 본래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파견 인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구 부위원장(전주4)은 영세 납

세자를 위한 고충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폐·휴업 선택의 기로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적부부서 또는 핵심 분야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업무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직원과 관리자의 정보제한 및 인사요인 최소화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아·태마스터스 대회 연기 등 파견 인력 변동에 대해 질의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기관파견이나 파견 기간 변동이 발생해 당사자 개인에게는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근무성적평점 결과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직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공직자들 중 본인의 자리에서 목욕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평하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혁신도시 교통문제 아직 미흡”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7일 제378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농산경제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북테크노파크 인력현황을 보면,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부족해, 조속히 인력을 충원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인 교통문제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교통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와 구도심에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재활용이나 폐기가 어려운 탄소섬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전북도에 분사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펼쳐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클레이드와 하부구조는 지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와, “지역업체가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혁신도시 교통과 주차시설이 열악해 주변지역의 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교통체계 개편과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시설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새해 주요 업무 계획

농업 공익적 가치 제고 · 스마트농생명 구체화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은 27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투자액은 전년도 대비 1,627억원이 증액돼 농업·농촌분야 9,939억원, 농식품분야 1,806억원, 축산분야에 2,39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농업 공익적 가치 제고

‘농업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장치로, 가입 확대를 위해 농작물 600억원, 가축 143억원 등 743억원을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투자한다.

농작물은 5만5,889농가에서 6만 1,000농가로, 가축은 4,367농가에서 4,500농가로 보험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TF운영을 통해 대상품목 확대,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2020년 가격하락이 발생한 5개 품목(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610농가에 20억원의 차액을 2월 말날 이전에 지급을 완료해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8개 품목을 모든 시·군에 동일 적용해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 선택권을 확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33억원을 지원해,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공역 최초로 시행한 농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64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가들과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과 함께, 농민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올해에는 지급대상자를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한 농민공익수당을 비롯한 9개 농업공익지불금 4,929억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체화

15개 핵심사업에 총 1조원 정도 투자되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는 7개 사업이 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푸드랜드 건설 등 6개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예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제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12월 완공

축산농장 지정 농장 대상 사후관리컨설팅 도입

거점소독시설 방역체계 확립

도농상생 생태문명시대 선도

밸리는 핵심시설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청년창업보육(2기, 3기) 52명(선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식품 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은 2월 공모를 준비 중이다.

▲축산악취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치질없는 방역 추진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냄새 증점관리 농가’를 210개소에서 245개소로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736호)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신규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지원체계도 대폭 개편해 퇴액비와, 악취저감시설 등 8개 사업을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통합했으며, 기존의 개별농가에서 지역단위(시·군) 개선계획 종합평가로 지원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AI,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4개의 거점소독시설(시·군별 2개소) 상시운영한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오리 사육제한을 확대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드론 항공방제도 지원한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발생시·군 및 인접 시·군 돼지 반·출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21개 시·군 → 35개 시·군), 농장 4단계 소독강화를 통해 농장내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항체양성을 제고를 통한 4년 연속 구제역 비발생은 목표로 올해 백신 770만 두를 공급하고,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와 예방농가 등의 집중시설 지원 확대(48만1,000두→60만8,000두), 스트레소완화제 등 369만두를 지원하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ICT 농축산 및 농업기계화

올해는 ‘원예분야 ICT융복합’, ‘청년회관 스마트팜 확산’, ‘수출전문

온실신품’ 등 3개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 양액의 자동·원격 제어 가능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보급과 농업경험이 부족한 귀농인, 청년층에 스마트팜 입문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농식품부 ‘수출전문 온실신품’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질병 차단, 생산성 향상 등 기존 축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축종별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기존 사업을 패키지로 통합해 지원한다.(최대 58억원)

스마트 축산 표준모델을 통해 일반 축산농가에 확산시켜 스마트 축산화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농기계현대사업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을 집중 투자해 고령층·여성층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과 중·대농의 추산지 일관적 계약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영농비용 절감과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함께하는 농촌마을 조성, 도농 융합상생 생태문명시대 선도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도농교류를 넘어 생태문명 속의 ‘도농융합상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농업·농촌 지속성 유지를 위해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농촌협약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이미 조성한 생생마을 1,000개소를 대상으로 ‘생생마을 시즌2’의 개념을 더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12개 시·군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한다.

심심산골 나물산업은 시군별로 1개 품목의 나물을 발굴해 산업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8년간 288억원을 투자하며, 시군의 대표나물을 생산부터 가공·유통·마케팅까지 포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1품목을 선정해 5억원을 생산·가공시설 등에 지원하고, 도시민 체험활동 지원, 농가 맞춤형 농촌 민박 등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나물 특화마을’까지 조성한다. /유호상 기자

김기영 도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세정 지원을”

김기영 도의원(익산3)은 27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도내 업체들에 대한 세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납세 편의 대책은 없이 말로는 서면자료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세무조사 예정 건수가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분야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고 올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인데,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시기에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난 기업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며 세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해 국내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 역대 최대치”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의 유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성론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면서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세제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과 도입과 ‘상호주의’ 사에서 갈피를 못잡았다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